

주간 통일정세

2015-08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남북기본합의서 23주년…“北 책임있는 태도보여야” (2/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19일은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정부가 "남북은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간단(間斷)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주저하지 말고 호응해 나와 남북 분단 극복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음을 덧붙였다.
 - 매체는 또한 이 당국자가 대화를 위해 북한의 전제조건을 먼저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뒤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을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윤병세 ‘북핵공조’ 발언 비난…“미국의 하수인”(2/18,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8일 "핵전쟁 하수인의 가소로운 나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당국이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적극 공모해나서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윤 장관이 지난 7일 독일에서 케리 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가 세계의 핵심불안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북 사안에 대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불안 요인은 미국의 ‘북침 핵전쟁 도발’이라고 강변함.

- 그러면서 윤 장관이 미국의 핵위협은 간과한 채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 을 불안요인으로 걸고 있다며 "온전한 사고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윤 장관을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매국노', '푼수 없이 날뛰는 천치' 등으로 매도한 신문은 남측이 북한 당국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중국 적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음.

■ 북한, 설 명절에 박 대통령 실명 비난... "못된 입질"(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식민지 주구의 경망스러운 입질'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의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발언을 거론하고 "그의 경망스러운 못된 입질이 야말로 북남관계의 암초이고 불행의 화근"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민족 최대의 명절' 에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 을 했다고 "최근 걸로나마 대화를 광고하던 박근혜가 끝내 대결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함.
- 또 신문은 "괴뢰집권자는 그 무슨 변화와 개방에 대해 떠들어댐으로써 저들이 운운하는 대화라는 것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이 푼살마긴 오치르마트 몽골 전 대통령을 인용해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신문은 "수전노식의 논리"라고 매도함.
- 매체는 또 "역시 미국의 철저한 노복, 더러운 앞잡이의 기질은 갈 데 없다"며 "괴뢰들은 본전도 못 찾을 그 따위 주제넘은 훈시질을 작작해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 남측 풍자 작품 인용해 박 대통령 비난(2/21, 우리민족끼리TV)

- 우리민족끼리TV는 21일 홈페이지에 '검은 고뿌(컵)' 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한 2분여 길이의 짧은 영상을 통해 "컵이 넘치기 전까지 컵에 부은 물의 양을 알 수 없듯이 통일도 꾸준히 노력 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동족 을 해치는 짓임을 알면서도 개방의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떠벌이는 마녀·마 귀할멈" 같다고 주장함.
- 이어 "너희가 떠는 '통일 대박' 은 쏟으면 화만 불러오는 반통일 구정물 박"이라 며 "더러운 그 입으로 통일을 말하지 말라. 검은 고뿌는 푸른 기와집 가보로 콧 처넣어버려라"라고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통일장관 교체, 남북관계 반전 계기 마련할까(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하며,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홍 내정자가 비교적 합리적인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함.

- 북한 신문, '원세훈 실형' 언급... "청와대는 초상집"(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감출 수 없는 부정협잡선거의 내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불법·부정선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번 판결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세훈 구속으로 지금 청와대는 초상난 집처럼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다"고 주장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잠수함발사미사일 첫 비행시험"(2/18, 워싱턴프리비컨)
 - 북한이 지난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첫 비행시험을 실시했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매체는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1월 23일 "KN-11" 미사일을 잠수함이 아닌 해상기지 플랫폼에서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지난해 이산가족 3천500여명 사망…수시상봉 시급(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4천 명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북녘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숨진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4만1천903명으로, 연평균 3천800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함.
 - 정부도 잘해야 1년에 1~2번, 한 번에 100명 정도 상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북한에 가족이 살아있는 이산가족들을 가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신왕래 및 수시 상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밝힘.
 -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북한은 조속히 대화에 응해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덧붙임.

- "남북한 질병 차이도 심각…보건의로 교류 시급"(2/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장이 "통일이 '대박' 이 되려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남북 간 보건의로 분야 교류가 필수"라며 남북간 보건 관련 교류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 교수는 인터뷰에서 "남북 간 보건환경의 차이를 내버려두면 통일 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히며, 남한의 의료 수준이 북한에 비해 크게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면 이를 '격차' 가 아닌 '차이' 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함.

- 북한 단체 "남측 국보법 인권유린 계속…철폐해야"(2/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21일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전함.
 -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사통보' 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은 앞으로도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지대로 남게 되고 언제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반제민전」 중앙위, 2월 16일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김정일 칭송 및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2.16, 중앙방송)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미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들에게 감행한 세균전 및 화학전 만행과 상전을 비호하고 동족을 모독·중상하는 괴뢰패당의 추악성을 알리기 위한 고발장'을 발표하고 '우리(北)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야수들과 그 하수인인 남조선 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죄악들을 반드시 결산하고 말 것' 이라고 위협(2.18, 중앙통신)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韓美 외교장관 회담(2.7 독일, 북핵문제 공조강화 등)에 대해 '대미추종 의식과 동족대결야망의 발로' 라며 '괴뢰들에게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은 없으며 오로지 반민족적 야망뿐' 이라고 비난(2.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보안법의 존재 역사는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조국통일의 길에 커다란 장벽을 쌓은 최악의 역사' 라며 '오늘의 문명시대에 중세기적인 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 이라고 비난 및 '보안법 철폐투쟁' 선동(2.19,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北인권 문제, 국제적 관심 등)에 대해 '여론을 오도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압살공조를 실현해 보려는 범죄적 흥심' 이라며 '외세 앞에서 초보적인 주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식민지 주구들은 인권을 논할 그 어떤 자격도 체면도 없다' 고 비난(2.20,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통준위」 회의 발언(2.16,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 등) 관련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 이라며 '박OO는 무분별한 망발이 불러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이제라도 입조심해야 할 것' 이라고 거듭 실명 비난(2.20, 평양방송)
- 北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2.21), 남한 '보안법' 은 "희세의 인권말살 악법"이라며 '보안법' 이 존재하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철폐 주장(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한 당국은 "대미추종행위(북핵문제·인권 공모결탁 등)의 수치스러운 길에서 벗어나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로 나와야 한다"며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참혹한 종말뿐"이라고 위협 지속(2.21,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실시한 韓美 합동군사연습들 및 앞으로의 훈련들 관련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켜 북침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흉악한 속심의 발로' 라고 비난(2.22,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정부 "北, 2010년 핵실험 가능성 높지 않아"(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외교부 당국자가 16일 북한이 2010년 5월 비밀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실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 당국자가 "(핵과학자 회보에서의 2010년 북한 핵실험 주장은) 핵실험 활동을 탐지하는 방법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사례로 들어가 있다"면서 "(해당 글에 기존에 없던)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든가 핵실험을 했다는 확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다"고 말했음을 덧붙임.

■ 북한, 워싱턴 "인권토론회" 비난... "초강경 대응"(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최근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를 거론하며 "적대세력의 무모한 인권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부쉬버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북한이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며 "저들이 벌여놓은 토론회라는 것이 한갓 뒷골목 썩덕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함.
- 또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미국이 그 무슨 내부 와해를 망상하면서 허황하기 짝이 없는 인권토론회 따위나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라고 조롱함.
- 담화는 탈북자 신동혁 씨의 거짓 증언 파문을 의식한 듯 COI 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탈북자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의 허위 증언에 기초해 날조되고 강압 채택된 사기 문서"라고 거듭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이탈리아 기업가, 노동신문에 김정은 찬양글(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5면 상단에 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이탈리아종합투자그룹 이사장 명의의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라는 글을 큼직하게 게재함.
- 발로리 이사장은 글에서 '위대한 태양의 진리' 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발표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함.
- 신문은 특히 그가 올해 자신의 75회 생일 때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노동당 간부를

- 직접 이탈리아에 파견해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에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관심하신 발로리를 잊지 않는다"고 축하해줬다고 밝히며 "누구나 감히 바랄수 없는 행복의 절정, 최상의 특전이 다름아닌 바로 나에게 차례진 것"이라며 감격해했다고 전함.
- 이어 매체는 마식령 스키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등을 김정은 시대 주요 성과로 나열하며 "조선의 일심단결의 원동력은 김정은 각하께서 펼쳐가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고 찬양함.

다. 회담 관련

- 황준국, 내주 러시아 방문…비핵화대화 재개 협의(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3~25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7일 외교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함.
 - 뉴스는 황 본부장이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쿨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해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 대미국

- "미국 한인 의료진 5월 방북…선진 의료기술 전수"(2/17, 미국의소리)
 - 미국의 한인 의사들이 오는 5월 북한을 방문해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미국의 한인단체인 조미의학과학교류축진회의 박문재 회장이 미국 한인 의사 25명이 북측의 초청에 따라 오는 5월 초 평양을 방문해 제17차 평양 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미국 6.25 생화학전 비난…"국제사회에 고발" (2/18,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8일 6·25전쟁 당시 미국의 생화학전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단체는 이날 미국을 상대로 한 ‘고발장’에서 미국이 전쟁 당시 강원도, 황해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천연두균을 퍼뜨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미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콜레라 전염 시험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침.
 - 뉴스는 이어 이 단체가 유엔 등 국제기구에 "야만적인 세균전 및 화학전 만행으로 수많은 조선민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강토를 오염시킨 대범죄를 저지른 미국을 마땅히 국제전범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북한, 미국에 ‘한미훈련 완화하면 대화’ 입장 전달”(2/19, 자유아시아방송)
- 싱가포르에서 지난달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낮춘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방송은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을 지낸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싱가포르 접촉의 미국측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임을 밝혔다고 전함.
 - 매체는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지는 않더라도 "평양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한 범위로 훈련 강도를 낮추거나 훈련 목적을 수정할 경우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미국측에 밝혔음을 전함.

마. 대중국

- 중국 “주북 대사관 관계자, 김정일 생일행사 참석”(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맞아 중국이 북한에 별도의 사절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어제는 북한의 ‘광명성절’로서 주북 중국대사관 측이 북한의 요청에 응해 북한이 평양에서 개최한 관련 활동에 참석했다"고 답변했음을 보도함.
 - 뉴스는 화 대변인의 이 발언은 중국이 김 전 위원장 생일에 별도의 대표단이나 축하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함.

바. 대일본

- "북한, 북일협에서 '납치용의자' 조사사실 통보"(2/16,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복수의 인사들을 조사한 사실을 최근 비공식 북일협의회 때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조사했다고 밝힌 인사는 요도호 납치범인 우오모토 기미히로(魚本公博)와 다른 요도호 납치범의 아내 2명 등임.
 - 또한, 산케이 신문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빚 때문에 강제 매각당한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본부 건물을 제3자를 내세워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입 자금 중 일부인 약 10억 엔(약 93억 원)을 홍콩에서 조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함.

- 북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은 생역지"(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시다 외무성 발언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황한 생역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일본이 최근 독도 문제를 다루는 새 부서를 만들고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독도 강탈 야망' 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각종 문헌 자료 등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 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인권 모멘텀 살리기' 백기쟁명식 해법 대두(2/18, 연합뉴스)
 - "북한인권 논의의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가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작년 12월 유엔 총회의 결의안 통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안건 채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것이 손에 잡히는 "성과" 와 "변화"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뉴스는 덧붙임.

- 마이클 커비 "신동혁 증언자중 한명일뿐...북핵 인권차원서 봐야"(2/21,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번복 논란과 관련, 신 씨는 여러 증언자 가운데 한 명이며 그의 증언 번복이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음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유엔·EU와 인권문제 협의 약속 거부"(2/21, 미국의소리)
 - 북한이 유엔·유럽연합(EU)과 인권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매체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가 19일 이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유럽연합과의 인권 대화,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 등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했던 모든 인권협력 약속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김영남, 'IS 이집트 콥트교 침수' 에 위로 전문(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이집트 콥트교도 침수와 관련해 18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집트 정부와 피해자 유가족에 위로를 전달하고 북한은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번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이집트인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4월 반동회의에 北김정은 공식 초청(2/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인도네시아가 반동회의 개최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김정은 黨 제1비서를 공식 초청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인도네시아가 이 회의에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도 같이 초청했다고 전함.

- 駐北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과 무관들 등,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2월 12일 감비아 독립 50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야하 자메)에게 축전(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월 18일 이집트 대통령(압델 파타 엘시시)에게 IS(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의 이집트 콥트교도 21명 참수 관련 위문 전문(2.18, 중앙통신)
- 주북 쿠바 대사(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2월 18일 강석주(黨 비서)·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박근광(黨 부부장)·신홍철(외무성 부상) 등 초청한 가운데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개최(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성), 2월 18일 離任 주북 라오스 대사(끼얏따썩 깨오반딧)와 담화(2.18,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월 18일 베네수엘라 대통령(니콜라스 마두로)에게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기도 적발' 관련 '現정부지지 및 연대성' 전문(2.19, 중앙통신)
- 北외무성 대변인 담화(2.19)】 北 인권토론회(美 워싱턴DC, 2.17) 진행 관련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모략농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문만행과 남조선에서의 보안법에 의한 탄압소동 등 인권유린행위를 종식' 시키라며 '무모한 인권도발책동을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위협(2.19, 중앙통신)
- 리퍼트 주한 美대사의 최근 발언(병진정책 포기과 제재의 길 중 선택 등)에 대해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제거하고 반공화국 압살흥계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흥심' 이라고 비난하며 '개는 짚어도 병진의 기관차는 최후승리를 향해 달릴 것' 이라고 주장(2.20, 중앙통신·노동신문)
- 新任 美 국방장관(애슈턴 카터) 등 '북한 위협(핵 강화 등)' 발언을 "조선반도 정세를 계속 극단으로 몰아가 북남대결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흥심"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긴장정세 책임' 주장(2.2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본 외상(2.12, 정기국회 외교연설) 등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는 것을 여론화해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흥심"이라며 '독도는 우리 민족의 불가분리(※不可分離)의 신성한 영토' 라고 강조(2.21, 중앙방송·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성) 일행, 2월 21일 몽골 방문과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회의(스위스 제네바) 참가차 평양 출발(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 리길성 부상), 2월 21일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후 귀환(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22일 허중만 「총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의장에게 80회 생일 축전(2.22, 중앙방송·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실크웜 동원 서해 타격·상륙 연습 참관(2/21,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서해 지역을 맡은 서남전선부대의 섬타격·상륙 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려는 장병들의 떨적 의지가 타 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4군단 관하 군인들의 섬 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이 진행됐다"고 밝힘.
 - 김 제1비서의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했고 제4군단장인 리성국 중장, 군단정치위원인 리영철 소장 등이 현지에서 이들을 맞이함.
 - 노동신문은 또한 지휘 테이블 위에 태블릿PC를 놓고 타격 연습을 참관하는 김 제1비서의 모습을 실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일본인 납북문제 총책 서대하 보위부 부부장, 중장 승진(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14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서대하 부부장이 일본인 납북문제를 다루는 북측의 '일본인 납치피해문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당국자 간 회담에서 북측대표로 납치 문제 협상을 전담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전함.
 - 통신은 또한 육군 중장에는 서대하를 포함해 강영태, 최창식 등 총 6명이 임명되었고 정세영과 리일찬은 항공군 소장, 김정식은 전략군 소장 칭호를 받았으며 육군소장에는 박명수, 고명수 등 총 17명이 올랐다고 덧붙임.

- ‘공석 상태’ 북한 경공업상에 최일룡 부상 임명(2/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고하는 내용의 방송에서 최일룡의 발언을 인용하며 그를 경공업상으로 소개함.
 - 방송은 최 신임 경공업상은 경공업성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로 국장에 이어 200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상으로 활동해왔다고 덧붙임.

- 북한, 새 외무성 부상에 신흥철 임명(2/18, 평양방송,연합뉴스)
 -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18일 주북 쿠바대사의 광명성절 기념 연회 소식을 전하며 강석주 당 비서 등과 함께 "신흥철 외무성 부상이 초대됐다"고 밝힘.
 - 연합뉴스는 그의 이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 대사 경력 등으로 미뤄 외무성 내에서도 비동맹국을 담당할 것이라 보도함.

- 북한 실세 3인방 공개석상에서 모습 감춰(2/18, 연합뉴스)
 - 뉴스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핵심 실세로 부상한 김정은의 ‘건축 브레인’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과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최근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도함.
 - 매체는 마원춘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평양국제공항 건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책을 받고 업무정지 처벌을 받았거나 좌천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 전하며, 변인선도 작년 11월5일 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에 동행한 이후 종적을 감췄다고 덧붙임.
 - 최휘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작년 8월8일 열린 "6·18건설돌격대" 쉼기모임에 참석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우리 관계 당국이 그 배경이 주목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김영남, 중요행사 잇달아 불참…고령 탓인 듯(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중요한 정치 행사에 잇달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이상설이 제기된다고 보도함.
 - 매체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인용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원로로서 정치적으로는 상징적 존재에 머물러왔기 때문에 그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갈등보다는 건강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을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조선총련 의장 '띄우기' ...불화설 잠재우기(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우리 장군님과 해외혁명동지' 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허종만 의장에게 보여준 " 열렬한 동지애" 를 부각함.
 - 특히 신문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조선총련에도 위기가 닥쳐 허 의장이 '날조 보도와 유언비어' 로 궁지에 몰렸을 때 김 위원장이 그를 '하늘같은 믿음' 으로 감싸줬다고 회고함.
 - 이어 신문은 허 의장이 작년 10월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로 8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원수님(김정은)의 은혜로운 사랑을 매일, 매시각 체험했다"고 강조하며 조선총련이 "주체혁명 위업, 총련 애국위업의 천만리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며 김 제1비서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6일 0시 「광명성절(2.16, 김정일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5일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 위해 연회 마련(2.16,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4일 「광명성절」 즈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군사칭호' 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하달(2.16,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을 맞아 "불세출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며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당, 김일성-김정일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 고 호소(2.1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 경축 연회, 2월 16일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0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 2월 16일 평양체육관에서 폐막식 진행(2.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 2월 16일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태양상을 참배(2.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2.16, 광명성절) 경축 빙상피겨축전 폐막식, 2월 17일 최룡해·양형섭·김용진(내각 부총리)·김영훈(체육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군장착사 조각단, 김정일 생일과 설명절을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이채로운 얼음조각들' 전시(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사회과학부문 토론회(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부당성과 군국주의적 영도팽창 책동 폭로단죄), 2월 18일 사회과학원에서 조희승(사회과학원 소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지금까지 19차례 열린(광명성절) 김정일화축전에 '꽃 33만 여상 전시·참가단위 연 1,400여개 및 총 75만 명 참관' 선전(2.18, 중앙방송)
-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 2월 19일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에 헌화(2.1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지도 밑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2월 18일 평양에서 진행 및 '지난 3년간 김정일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정형 총화' (2.19, 중앙방송·중앙통신)
- 설 명절 경축 만수대에술단 삼지연악단공연, 2월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19,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성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 지도(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9차 김정일화축전(김정일 생일 기념, 2.13 개막) 폐막식, 2월 21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의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2.18)' 결론은 畵民이 "틀어쥐고 나가야할 전투적기치"라며 '김정일의 유훈실현(식량문제 우선 집행 등)을 위해 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과 전투적 과업관철 총공격전' 독려(2.21,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22일 故 백복흥(김일성성·김정일상계관인이며 4.15문학창작단 작가) 영전에 화환 전달(2.22,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올해 이모작 수확량 18% 줄 것"(2/18, 미국의 소리)
 - 북한의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종자부족과 가뭄 등으로 지난해보다 18% 감소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보도함.
 - FAO는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감자, 밀, 보리 등 이모작 작물의 총 수확량을 30만1천t으로 추정하고 이는 지난해보다 18% 감소한 규모라고 밝힘.
- 북한, 석탄-철광석 수출 통제 필요성 제기돼(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최신호(작년 10월 20일 발간)의 한 논문이 "각이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전함.
 - 매체는 논문은 "수출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동력 자원들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지하자원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꼽고 "(이들 자원의) 수출을 극력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을 보도함.

라. 대외 경제관계

- 중국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일꾼들 외화벌이 '고전' (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장성택 라인 교체는 만년 넘게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중국에 나와 있던 북한 무역일꾼들의 무더기 소환 사태가 이어졌다"면서 "이들 가운데 30%가량만 중국에 돌아오고 70%는 교체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전하며 중국 내 무역일꾼들을 인위적으로 대거 교체한 뒤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또한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에서 사라진 광물, 수산물 등 일반교역과 섬유, 의류 등 위탁가공교역 대부분이 북중경협으로 흡수됐지만, 일반교역의 경우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혈값 판매도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덧붙임.
 - 뉴스는 이어 중국 당국의 공식 무역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경상보(北京商報) 등 현재 매체들은 민간 정보제공업체 자료를 인용해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1천678만t으로 전달보다 38.4%,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감소했다고 전함.

-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압중이전력케이블·고압수지전력케이블의 '지난 해 10월 스위스 검사총협회(SGS) 품질관리체계인증 획득 및 최우수제품 등록' 선전(2.18, 중앙통신)
- 각지 여러 부문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 지난 한 해 동안 2만여 건의 기술혁신안을 연구·도입했다고 선전(2.22,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TV에 장애인 첫 등장...국제사회 인권공세 맞대응(2/11, 조선중앙TV; 2/20,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지난달 11일 "나는 심장으로 행복을 본다"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에서 시각장애인 여성 리춘향(37)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난함.

- 리 씨는 동정을 받아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군인이었던 남편의 청혼을 거절했지만 "두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평생을 혼자 산다면 최고사령관 동지가 가슴 아파할 것"이라는 남편의 구애에 못 이겨 가정도 이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며 중앙TV는 리씨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악기도 연주하는 모습도 부각함.
- 연합뉴스는 북한이 TV에까지 장애인을 등장시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선전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장기화로 접어든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함.

■ "삼둥이는 당에서 책임집니다"...북한 출산장려책(2/6, 노동신문; 2/20,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지난 6일 올해의 첫 세 쌍둥이를 낳은 남포시의 산모 김혜경이 "평양 산원에 90여 일간 입원해있는 동안 칠색 송어 요리를 비롯한 갖가지 건강회복에 좋은 영양음식과 꿀, 보약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았다"고 소개함.
- 연합뉴스는 북한에서 세 쌍둥이(삼둥이)는 4살까지 육아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10번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모성 영웅'으로 추대한다고 전하며,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이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높이기엔 안간힘을 쓰는 북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보도함.

■ 북한, 정치국 회의 결정 실천 독려..."생활향상 우선"(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유훈' 중 하나로 '주민생활 향상'을 들고 이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농산·축산·수산업에 힘을 집중해 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식업, 온실재배, 버섯생산 등을 '균중적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고 독려함.
- 또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지방에서는 각각의 특색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임.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동해 표류 북한 어선 및 선원 2명 구조(2/17,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및 선원 2명을 우리 국적 화물선이 구조해 해경이 현재 보호 중이라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구조된 선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17일 오후 5시 또는 23일 오후 1시께 관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하겠다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17일 관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고 덧붙임.
- "신동혁 자서전 미국 작가 '북 조종사 탈출기' 출간"(2/20, 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 을 집필한 미국 전직 언론인 블레인 하든이 6.25전쟁 직후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공군 조종사 노금석 대위의 탈출기를 펴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함.
 - 하든은 RFA와 인터뷰에서 노 대위의 탈출기 '위대한 수령과 조종사' 를 오는 3월15일 정식 출판할 예정이라며 "북한 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소명으로 여긴다"고 밝힘.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휴대전화 단속조직 '1080상무' 신설"(2/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국가안전보위부(우리의 국가정보원) 산하에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지금까지 북한이 '1118상무' 나 '109상무' 를 조직해 중국기지국을 이용

하는 불법휴대전화를 단속해 왔지만 합법적인 휴대전화로까지 단속 범위를 넓혔다고 전함.

- 방송은 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1080상무는 순전히 국내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만 감시하기 때문에 다른 검열 조직들과는 활동이 겹치지 않는다"고 전하며, 1080상무라는 명칭은 김정은의 생일(1월8일)에 평온과 안전을 상징하는 숫자 "0" 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보위가 최우선 임무라고 덧붙였다.

■ 미국 전문가 '폐쇄설' 요덕수용소 "외관상 변화 없어"(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정식명칭 15호 관리소)가 최근 폐쇄설이 나왔지만, 외관상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미국의 북한군사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를 인용해 17일 보도함.
- 버뮤데스는 "외관상 수용소 내 인구가 꾸준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전체적 구조나 수용소 내 활동에도 특별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농장과 과수원, 축사, 목재 생산시설을 비롯한 경공업 시설, 수력전기 시설, 수용소 내 양식어장 등도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함.
- 뉴스는 그가 다만 "수용소 내 소성리 동쪽의 광업활동이 폐쇄됐고 일부 주택의 설계가 약간 바뀌었고 농업지원 시설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용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음을 덧붙였다.

마. 사회 동향

■ 북한의 설 풍속도...주민들 "황금연휴" 즐겨(2/18, 연합뉴스)

- 북한은 설 당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휴일로 하고 있으나 올해는 주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3회 생일인 "광명성절" (2월16일) 연휴 이틀을 합쳐 최장 8일의 연휴를 보내는 특급 명절을 맞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북한 매체들이 평양체육관과 함흥광장 등 전국의 광장과 공원에서는 줄넘기, 제기차기, 연 띄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펼쳐졌고, 문수물놀이장, 인민야외빙상장, 능라곱등어(돌고래)관 등이 관광객들로 붐볐다고 보도했음을 전함.

- 북한 주민들 설 먹거리 예년보다 풍성할 듯(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농산,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먹는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라는 논문을 통해 축산업 진흥을 거듭 촉구했음을 보도하며 단순히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이 풍성해 지도록 하는데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 보도함.
 - 뉴스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그동안 식량 생산의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도 함께 추구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정권이 주민을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하나"라고 지적했음을 전함.

- 북한 학생들 교복 다양해지고 색깔도 밝아진다(2/21, 통일신보)
 -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1일 "머지않아 공화국의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생들이 새 교복을 받아 안게 된다"고 밝힘.
 - 신문은 이번에 지급받는 교복은 "지난 시기의 교복과 사뭇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며 국가산업미술지도국,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평양미술대학 등이 보낸 후보작 중 가장 우수한 디자인이 선택됐다고 설명함.

-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2월 16일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진행(2.16, 중앙통신)
- '떡국 등 설음식·세배·웃놀이' 등 설명절 풍습 소개(2.18, 중앙통신)
- 「국제 모국어의 날(2.21)」 즈음 리성호(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중통 문답을 통해 "평양 문화어는 조선민족어의 본보기"라며 '평양말(語)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 등 선전(2.21,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황준국, 내주 러시아 방문…비핵화대화 재개 협의 (02/17, 연합뉴스)
 - 외교부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3~25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
 - 황 본부장은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쿨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해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그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및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지난 5일 있었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측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이며, 비핵화 대화를 어떻게 재개 시킬지에 대해 한미일 및 한중 간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됨.

- “북한, 잠수함발사미사일 첫 비행시험” <미국 매체> (02/19,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첫 비행시험을 실시했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매체는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1월 23일 ‘KN-11’ 미사일을 잠수함이 아닌 해상기지 플랫폼에서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비행 시험을 감시하기 위해 미군 정보함들과 항공기가 동원돼 일단 성공적으로 발사된 KN-11의 탄도 궤적을 추적했으며, 비행 시험에 대한 다른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SLBM에 관한 정보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논평을 거부함.

- “北 잠수함 미사일 비행시험 아닌 사출시험 실시” (02/20,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달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첫 비행시험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1월23일 해상기지 플랫폼에서 SLBM에

대한 첫 비행시험을 실시했다는 외국 언론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행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또한, 소식통은 "북한은 작년에 신포 조선소에 수직발사관 지상시험 시설을 설치해놓고 여러 차례 사출시험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이런 사출시험 시설을 해안가에 설치한 뒤 시험을 했고, 발사관에서 튀어나온 물체는 수십m 전방에 떨어지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비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리퍼트 美대사 "北, 회담할 마음 없다는것 확인" (02/17,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북미대화 관련, "북한에 여러 방법으로 다가갔다"면서 "회담이라는 게 진지하게 논의할 마음이 있는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북한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리퍼트 대사는 이날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해 진지한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당분간 기다리면서 외교·경제·안보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전례 없이 4번이나 방문했다"면서 "내가 부임한 것은 이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미이고, 미래 세대가 공고한 한미동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 탄탄하고 견고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북한 사이버 공격능력 '별로' ... 그래도 위험" (2/18, 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기술(IT)매체 "리코드" (re/code)와 인터뷰에서 국가별 사이버 공격 능력을 즉흥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란은 '우수'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우수'한 반면 북한은 이들 국가 수준보다 낮다고 말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음에도

(소니 픽처스 해킹에서 보듯이) 피해가 얼마나 크냐"면서 "국가가 아닌 단체나 개인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으로 해킹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했다.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능력 수준은 매우 높고 이란도 높은편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핵 억지력과 유사한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과는 핵무기 협상을 계속하듯이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미국 6.25 생화학전 비난…“국제사회에 고발” (02/18,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미국의 생화 학전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요구함.
- 이 단체는 이날 미국을 상대로 한 ‘고발장’에서 미국이 전쟁 당시 강원도, 황해도 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천연두균을 퍼뜨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미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콜레라 전염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에 "야만 적인 세균전 및 화학전 만행으로 수많은 조선민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강토를 오염 시킨 대범죄를 저지른 미국을 마땅히 국제전범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하였음.
- 이는 북한이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역인권공세의 방편으로 6·25전쟁 당시 미국이 저지른 생화학전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북한, 미국에 ‘한미훈련 완화하면 대화’ 입장 전달 (02/19, 연합뉴스)

- 싱가포르에서 지난달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낮춘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을 지낸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싱가포르 접촉의 미국측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RFA에 이 같이 밝히며, 또한 북측이 싱가포르 접촉에서 "남북관계는 정상화가 목적이다. 올해도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임.
-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18~19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

성 부상 등 북한 현직 관리들과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 전직 관리들이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였음.

- 북한, 미국 국방장관 발언 비난…“히스테리적 발작” (02/21,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임명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북한 위협’ 발언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전쟁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에 대한 병적 거부감과 체제대결에 환장이 된 전쟁 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연일 ‘북한 위협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명분을 세우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카터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중국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일꾼들 외화벌이 ‘고전’ (02/16, 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와 자국에 필요한 물품 조달 등을 위해 중국에 파견한 무역일꾼들이 대대적인 인력 교체와 갈수록 나빠지는 시장 환경 등으로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내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처형한 뒤 북한 무역일꾼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으며, 새로 중국에 배치된 인원들은 40대가 많아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젊어졌고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에서 사라진 광물, 수산물 등 일반교역과 섬유, 의류 등 위탁가공 교역 대부분이 북중경협으로 흡수됐지만, 일반교역의 경우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헐값 판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함.

- 중국, "주북 대사관 관계자, 김정일 생일행사 참석" (02/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축하 행사에 주북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맞아 중국이 북한에 별도의 사절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어제는 북한의 '광명성절'로서 주북 중국대사관 측이 북한의 요청에 응해 북한이 평양에서 개최한 관련 활동에 참석했다"고 답변함.
 - 화 대변인의 이 발언은 중국이 김 전 위원장 생일에 별도의 대표단이나 축하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라. 일·북 관계

- "북한, 북일협에서 '납치용의자' 조사사실 통보" <교도> (02/16,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복수의 인사들을 조사한 사실을 최근 비공식 북일협의회 때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함.
 - 북한이 조사했다고 밝힌 인사는 요도호 납치범인 우오모토 기미히로(魚本公博)와 다른 요도호 납치범의 아내 2명 등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적군과의 민항기 납치사건인 '요도호 사건(1970년)'을 일으킨 뒤 북한으로 망명한 우오모토 씨 등은 요도호 사건과 별개로 유럽에서 일본인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갔다는 의혹을 받아들임.
 - 이와 관련, 북한은 일본인 납치 재조사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포함한 일본의 유연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의 조사결과에 일본이 기대하는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북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은 생역지" (02/21, 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성 발언을 비난하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영토'라고 강조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사다 외무성 발언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황한 생역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논평은 일본이 최근 독도 문제를 다루는 새 부서를 만들고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독도 강탈 야망’ 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각종 문헌 자료 등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 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마이클 커피 “신동혁 증언번복, 전체 결론상 중요치 않아” (02/17, 연합뉴스)
 - 마이클 커피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혁 씨의 부분적 증언 번복 논란이 COI 보고서 전체의 결론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함.
 -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진두 지휘한 커피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거짓 증언이라고 비판하는 탈북 여대생 박연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함.
 - 커피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신씨의 증언 번복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신씨의 증언 번복을 계기로 COI 보고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북한의 공세에 맞서 큰 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주유엔 北 차석대사 "북한 인원 토론회에 강력 대응" (2/17, 연합뉴스)
 - 북한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 워싱턴DC에 열리는 북한 인권 토론회에 ‘매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 장 차석대사는 "북한이 미국 정부에 대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북한이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공식 요청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지만, 국무부는 이 행사가

정부 행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는 우리의 요청이 거부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함.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장 차석대사는 "우리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다루스만 "다음달 제네바서 새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 (02/18,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종식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화한 이후 처음 나오는 결의안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됨.

■ 북한, 워싱턴 '인권토론회' 비난... "초강경 대응" (02/19,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최근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적대세력의 무모한 인권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음.
- 북한 외무성 담화는 북한이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며 "저들이 벌여놓은 토론회라는 것이 한갓 뒷골목 썩덕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함.
- 한편, 워싱턴DC에서는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연세대 등의 주최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음.

■ "북한, 유엔·EU와 인권문제 협의 약속 거부" <VOA> (02/21,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유럽연합(EU)과 인권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

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는 19일 이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유럽연합과의 인권 대화,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 등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했던 모든 인권협력 약속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힘.
- 이 관리는 "(약속 이행 거부) 미국이 인권을 구실로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 북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북한은 인권 압박에 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여기에는 '물리적 조치'도 포함된다고 강조함.

■ "마이클 커비 신동혁 증언지중 한명일뿐...북핵 인권치원서 봐야" (02/21,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번복 논란과 관련, 신 씨는 여러 증언자 가운데 한 명이며 그의 증언 번복이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재차 강조함.
- 커비 전 위원장은 "현행 '제노사이드 협약'은 인종, 민족, 국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대량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정치적 관점, 즉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고, 제노사이드가 주민을 대량학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북한 인권문제 역시 제노사이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그는 다만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것의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북한에서 굳이 제노사이드의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이미 반(反) 인권범죄에 관한 충분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역설하며, 이어 "북핵 문제도 인권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위안부 할머니, '日 역사왜곡 반대' 미국학자에 감사편지 (02/17,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미국 역사교과서 수정 시도를 비판하며 최근 집단성명을 낸 미국 역사학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냄.

-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시도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미국 역사학자 19명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의 잘못된 점을 당당하게 지적해준 데 감사한다"고 밝힘.
 - 할머니들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하와이대 허버트 지글러 교수와 일본에 항의하는 집단 성명을 주도한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튼 교수 등 19명의 미국 역사학자들로, 할머니들은 편지에서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사실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 당당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모습에 감사함과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함.
- 미 국무부 "한미일 협력, 상호운용적 삼각MD 개발이 초점" (02/21, 연합뉴스)
 -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한·미·일 3국간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MD)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고 밝힘.
 - 프리드 부차관보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핵군축 정책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이날 전함.
 -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3국 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한·미·일 3각 MD협력체제 강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특히 한국이 독자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적극적으로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3국 MD 협력 전제 아냐" (02/21, 연합뉴스)
 - 국방부는 "작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해 3국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가 한미일 간 상호운용적인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 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3국의 정보공유 이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힘.
- 또한,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 관련) 상호운용성 보장 협력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임.

나. 한·중 관계

- 중국,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3월말 개최 논의' 확인 (02/17,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3국은 3월 하순에 중·일·한(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함.
 - 이는 3국이 3월 하순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 했으며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됨.
 -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중의원 부의장 "일본이 이상해진다" 아베 비판 (02/16, 연합뉴스)
 -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일본 중의원 부의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시정연설과 중의원에서의 답변에 관해 "이대로라면 일본이 이상하게 돼 버린다"며 이같이 언급함.
 - 가와바타 부의장은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가 넘게 차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 일부가 있으므로 반성해야 하고, 정상적인 일본을 만들도록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크다"고 덧붙임.

- 일본정부,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경제적 관점서 판단" (02/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2001년부터 이어온 통화스와프(교환) 계약을 이달 23일 종결하기로 한 것이 경제·금융 차원의 판단이라고 밝힘.
 - 이번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달러, 엔-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 간 통화 스와프로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임.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어디까지나 경제적, 금융적 관점에 따라 양국 당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 악화나 자존심 싸움이 통화스와프 중단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일본 민주당 대표 "집단 자위권 결정은 헌정의 큰 오점" (02/16, 연합뉴스)
 -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작년 7월 아베 정부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헌정사상의 큰 오점"이라고 정면 비난하였음.
 - 오카다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중의원 본회의 정당대표 질문을 통해 "일개 내각의 판단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은 입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 정권 대결의 날을 세웠음.
 - 지난 1월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대표질문에 나선 그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아베 총리가 과거에 "현행 헌법은 연합 국군총사령부(GHQ)의 문외한들이 8일 만에 만든 물건"이라고 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일본,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정무관 파견 (02/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시마네(島根)현이 이달 22일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 일본명)의 날' 기념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발표함.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무관 과견 목적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에 진력해온 시마네현 또는 시마네현 의회를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려는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행사장에서 정부의 입장, 노력을 재차 확실히 발신해 국민 여론을 계몽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이에 한해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며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 자민당 올해 목표, '개헌운동-야스쿠니 참배' (02/17,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개정 준비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올해 주요 활동 목표인 '운동방침' 원안(原案)에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헌법 개정을 당시(黨是, 당의 기본 방침)로 출발한 보수 정당의 긍지"라고 창당 60주년의 기조를 표현하면서, 아울러 '개헌 찬동자 확대 운동을 추진한다' 며 헌법 개정엔 필요한 여론 조성을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음.
- 그러나 자민당은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워 국제 사회와 역사 인식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인 52%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 표현 넣어야" (2/17, 연합뉴스)

- 일본인의 과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전후 70년 담화에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사히(朝日)신문은 14~15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인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전후 50년(1995년) 무라야마(村山)담화와 전후 60년(2005년) 고이즈미(小泉)담화에서 '통절한 반성' 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 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응답자의 52%는 올해 8월 15일 무렵에 발표될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넣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은 31%로 조사되었음.

- 아베, 전후 70년 담화서 식민지·침략 사죄여부 모호성 유지 (02/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여름 발표할 전후(戰後)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가 과거 담화를 전반적으로 계승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함.
 - 아베 총리는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전후 60년의 고이즈미(小泉) 담화(2005년)를 비롯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며, 앞으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전후 70년 담화는 "그것을 전체로 작성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1주년인 2013년 12월26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나라를 위해 싸워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분들에게 존송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음.

- 日 자민당 총무회장 "한일관계 정치 결단 필요" (02/17,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량급 인사인 니카이 도시히로(75·二階俊博) 총무회장(중의원 11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당부함.
 - 최근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니카이 총무회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에게 박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보고하면서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래 끌어 보았자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때로는 정치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함.
 - 맥락상 니카이 총무회장이 말한 '정치적 결단'은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또한 니카이 총무회장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군위안부를 둘러싼 문제를 관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박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 설명하였음.

- 아베 "군 위안부, 정치·외교문제화 안돼" (02/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필설(筆舌)로 다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이점에 관한 내 생각은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며 "그간의 역사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21세기 야말로 인권침해가 없는 세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으로서도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이다"고 언급함.

- 또한 아베 총리는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 개선을 향해 대화를 거듭하겠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수뇌(首腦) 수준에서도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것으로 보임.

■ 일본 연립여당 대표, 아베에 무라야마담화 계승 촉구 (02/18, 연합뉴스)

-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8월 15일 무렵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관해 "(무라야마담화 등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마구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후 70년 담화가 "일본 국민에게도, 국제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며 "총리도 충분히 고려하고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 한편, 1995년 일본의 패전 50년을 맞아 발표된 무라야마(村山)담화는 일본이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의 존망을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제국주의 정책을 사과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아베담화' 검토 전문가 모임에 아베 측근 포함 (02/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전후 70주년을 맞아 올여름 발표할 '아베 담화'의 내용 등을 논의할 전문가 회의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들이 포함되었다고 전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오후 정례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의 문안 등을 검토할 전문가 회의 위원 명단을 발표함.
- 총 16명의 위원 중에는 사실상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보수 논객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67) 국제대학 학장,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67) 교토(京都)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제계 인사인 니시무로 다이조(西室泰三·80) 닛폰유세이(日本郵政) 사장, 아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68) 메이지(明治)대 특임교수 외에 요미우리(讀賣)신문 미국 총국장 등 현역 언론인 2명도 위원으로 임명되었음.

- 일본 자민 총무회장 "아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욕" (02/21,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은 20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욕을 갖고 있다고 밝힘.
 - 도쿄신문에 따르면 니카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7일 아베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면서 "총리와 우리들의 생각에는 거리가 있는 것도, 괴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함.
 -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으며 정치 결단도 필요하다"고 전달하자, 아베 총리는 "여러가지를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힘.

- 설 연휴 정적 갯 일본대사관 앞 '다케시마의 날 규탄' (02/22, 연합뉴스)
 -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이 잇따름.
 -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15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일본 억지 독도의 날 폐기 규탄대회' 를 열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이날 규탄 대회는 3·1 만세운동을 재현한 퍼포먼스와 학생 대표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발표 등의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행사를 끝낸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침략사에 대해 사죄하고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음.

- 정부 "日 독도 도발행사 개탄...역사퇴행적 행위" (02/22,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이 이른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 퇴행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지방정부의 독도 도발 행사에 또다시 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함.

- 덧붙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년째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지적하였음.
-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무망한 것임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23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할 것으로 알려짐.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시진핑, 사상 최고 수준 지도력" <미국 전직 고관들> (02/18, 연합뉴스)
 -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지도력(영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홍콩 봉황(鳳凰)TV가 20일 보도함.
 - 존 헨츠먼 전 주중 미국대사는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 주석이 근래의 중국 최고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가장 닮아 있다"면서 "시 주석은 큰 틀에서 '역사상 유례없는(前所未有. unprecedented)' 영도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헨츠먼 전 대사의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시 주석의 영도 방식은 덩샤오핑 또는 마오쩌둥과 많이 닮아 있다"고 평가했으며 시 주석은 장기 재임 기간 시스템 조정, 반부패 조치 등을 통해 공산당에게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오바마 "중국 아닌 미국이 세계무역질서 써나가야" (02/2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21세기 무역 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회가 신속협상권(TPA)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면서 "이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라고 강조함.
 - 한편,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임.

바. 미·일 관계

- 미셸 오바마 방일은 '캐롤라인의 힘' (02/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다음 달 중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 전해짐.
 - 이번 미셸 오바마의 방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둔 시점에 미·일관계의 끈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셸 여사의 이번 방일이 외교적 의미보다는 케네디 주일 대사의 개인적 역량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케네디 대사의 가문인 케네디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진보진영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부부로서는 가장 신경써야 할 정치그룹 중의 하나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일본, 미국 상대 '아베담화' 정지 작업 본격화" (02/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지작업을 본격화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는 담화 발표 후 예상되는 한국, 중국의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은 5월 초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방미와 미일정상회담 전까지 이러한 정지작업을 마치겠다는 생각임.
 -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새 담화에 이러한 표현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 **日 극좌 테러리스트 38년만에 본국송환 (02/20, 연합뉴스)**
 - 일본 정부와 테러조직 "일본적군" 사이의 수감자-인질 맞교환으로 풀려난 뒤 테러를 저지른 시로사키 쓰토무(67·城崎勉) 씨가 38년만에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일본 적군파에서 파생된 과격조직 일본적군 멤버인 시로사키는 198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에 금속탄을 발사하는 등 테러를 한 혐의로 1992년 일본 경시청에 의해 국제 수배되었고,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미국에서 형기를 마친 시로사키의 신병을 이날 인도받아 지바(千葉)현 나리타(成田)공항에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체포하였음.
 - 한편, 1996년 네팔에서 체포된 시로사키는 미국으로 이송돼 미국대사관 테러 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일본으로 이송되었음.
 - **일본, 유엔결의 없이도 자위대 타국군 지원 추진 (02/2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전투 중인 타국 군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함.
 - 이번 조치는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을 규정할 필요도 없어짐.
 - 이는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자위권에 입각해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군대 등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 과 관련해서도 '주변' 이라

는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했음.

사. 미·러 관계

- 미국인들, "최대의 적은 러시아"…북한 추월 (02/17, 연합뉴스)
 -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83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러시아를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이 전체의 18%로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발표함.
 - 한편, 갤럽은 러시아 내에서의 대미 여론도 크게 악화돼 있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4%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82%는 부정적이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외교관계는 물론 국민 여론에도 이른바 '신(新) 냉전' 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정책적 공통분모를 되찾는다면 여론은 금방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함.

- 바이든 "반군·러시아, 휴전협정 위반…대가 치를 것" (02/18,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행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과 관련, 동부 분리주의 반군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함.
 -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과 손잡은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데발체베 안팎에서 벌인 휴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지난 12일 합의한 휴전협정을 비롯해 민스크 합의를 계속 어긴다면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함.
 -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은 최근 2차 휴전협정에 합의하고 15일 자정을 기해 휴전협정을 발효했으나, 분리주의 반군과 러시아군은 현재 동부 교전지역인 데발체베를 기습했으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의 접근도 거부하고 있음.

아. 중·일 관계

- 중국 해경선, 8일 연속 센카쿠 해역 순찰 (02/17, 연합뉴스)
 - 중국 해경선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열도 부근에서 순찰 항해를 하고 있다고 중국 환구망(環球網)이 보도함.
 -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중국 해경선 3척이 지난 10일부터 연속 8일째 센카쿠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 해경 2337호, 2401호, 2506호 등으로 구성된 중국 해경선 편대는 일본 측의 계속된 경고 방송에도 항해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일본, 4년만에 안보대화 추진...이르면 4월 개최 (02/1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국방부 간부와 일본 외무성, 방위성 간부가 참석하는 안보대화를 이르면 올해 4월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열고자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힘.
 - 중국과 일본의 안보대화는 2011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나서 재개되지 못했으며 작년 11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을 계기로 다시 추진되었음.
 - 이와 관련, 안보대화가 재개되면 양측은 상대국의 주요 외교·안보 동향에 관해 사정을 청취하고 자국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대화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중국의 군비 확장 등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임.

자. 중·러 관계

- 중·러, 중국 동북서 2차대전 소련군 유해 공동 발굴 (02/17,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1945년 8월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옛 소련군 장병들의 유해를 공동 수색·발굴 하기로 함.
 -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러는 '세계 반과시즘전쟁 및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인 올해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소련군 유해 수색·발굴사업을 벌이기로 최근 합의하였음.

- 이와 관련, 중·러는 첫 유해 수색·발굴 대상지를 양국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黑龍江) 성 무단장(牧丹江)시 무링(穆稜<稜에서 禾 대신 木>)현으로 정하였고, 우선 오는 5월 10일부터 한 달간 공동 수색·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함.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국내휴대폰 단속조직 신설(자유아시아방송, 2.16)
 - 국내용 손전화를 단속하기 위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신설한 '1080 상무'가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복수의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음.
 - 11일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지난해 11월에 '1080 상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1080 상무'는 불법적인 손전화가 아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손전화를 검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음.
 - '1080 상무'는 다른 국가보위부 요원들처럼 항상 사복(민간복)을 입고 있지만 당 기관 간부들을 제외한 사법기관, 행정기관 간부들,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검열, 회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소식통들은 "'1080 상무'는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조용히 조직됐다"며 "뒤늦게 '1080 상무'의 조직을 알게 된 간부들과 주민들은 '이젠 국내휴대전화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전문가 '폐쇄설' 요덕수용소 "외관상 변화 없어" (연합뉴스, 2.17)
 -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정식명칭 15호 관리소)가 최근 폐쇄설이 나왔지만, 외관상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미국의 북한군사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가 밝혔음.
 - 버뮤데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토론회에서 201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디지털 글로벌사(社) 등이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토대로 요덕수용소 내부의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소개했음.
 - 그는 "외관상 수용소 내 인구가 꾸준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전체적 구조나 수용소 내 활동에도 특별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다만 "수용소 내 소성리 동쪽의 광업활동이 폐쇄됐고 일부 주택의 설계가 약간 바뀌었고 농업지원 시설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용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음.

- 그러나 "우리는 북한 관리들, 특히 북한 인민군과 내부 치안조직이 은폐와 위장, 기만전술에 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며 "(결국 2012년에 폐쇄되기는 했지만) 함경북도 회령 22호 관리소의 경우와 같이 폐쇄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 북한, 워싱턴 '인권토론회' 비난... "초강경 대응"(연합뉴스, 2.19)
 - 북한은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최근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인권 압박에 대한 " 초강경 대응" 을 다짐했음.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토론회를 거론하며 "적대세력의 무모한 인권도발 책동을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짓부쉬버릴 것" 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담화는 북한이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며 " 저들이 벌여놓은 토론회라는 것이 한갓 뒷골목 숙덕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고 지적했음.
 - 또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미국이 그 무슨 내부 와해를 망상하면서 허황하기 짝이 없는 인권토론회 따위나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짓" 이라고 조롱했음.
- 북한, 한·미 "병진노선 포기" 요구 비난(연합뉴스, 2.20)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피고석에 끌어내야할 인권말살주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는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남조선 땅을 인권 무덤으로 만든 자들이 인권모략소동에 날뛰는 것은 조소를 자아낼 뿐" 이라고 비꼬았음.
- 북한TV에 장애인 첫 등장...국제사회 인권공세 맞대응(연합뉴스, 2.20)
 - 장애인에 대한 공식 언급을 꺼려온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 TV 방송에 장애인을 잇달아 출연시켜 눈길을 끌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고마운 품에서 우리가 삽니다" 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 방송은 평양 시내를 환한 표정으로 자유롭게 오가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모습을 부각했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 또 무용·미술·음악 등 예술 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의 모습과 이런 "사회주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방송하며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음.
- 북한 매체가 장애와 관련된 글이나 기사를 실는 경우는 있었지만 장애인을 직접 TV에 등장시킨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임.

■ 북, 늘어난 월급으로 생계유지 어려워(자유아시아방송, 2.20)

- 북한이 '새경제관리체계'를 시험적으로 도입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종전의 수십 배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올려 주었지만 그것으로도 여전히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 현지 소식통들로부터 제기됐음.
- 16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새경제관리체계'를 시험 도입한 '혜산신발공장'의 경우 재단사 3명의 생활비가 제일 높다"며 "1월 '혜산신발공장' 재단사 3명의 생활비는 우리(북한) 돈 3만 4천원이었다"고 밝혔음.
- '혜산신발공장'에서 생산된 운동화는 한 켤레 당 장마당에서 중국인민폐 7원(위안)으로 팔리는데, 장마당에서 입쌀은 kg당 중국인민폐 3원50전이어서 이 신발 한 켤레를 사려면 쌀 2kg의 값을 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당국의 선전을 겉으로 보면 중앙이 인민소비품 생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선 식량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며 "식량난이 제일 심해지는 3월부터 5월 사이를 어떻게 넘기겠냐가 중앙의 첫째가는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외교관 "유엔과 인권 협의 약속 무효" (미국의소리, 2.21)

-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했던 모든 인권 협력 약속은 무효라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밝혔음.
- 구체적으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비롯해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정,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인권 대화, 인권 문제에 관한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 등 북한이 이행기로 한 모든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에 훨씬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여기에

는 '물리적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이면서 인권 압박은 체제 전복의 구실이며, 따라서 국방력 강화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 이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북 리수용 외무상,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위해 출국(미국의소리, 2.22)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리수용 외무상 일행이 몽골을 방문한 뒤 다음달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리 외무상은 이달 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대규모 인권회의를 강하게 비난하며 초강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이에 따라 리 외무상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이런 주장과 위협을 반복하며 북한에 인권 유린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됨.

2. 북한 인권

■ 탈북자 신동혁 "굴복하지 않겠다" ...북한인권운동 재개(연합뉴스, 2.16)

- 북한 정치범수용소 증언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15일 "굴복하지 않겠다"며 북한 인권운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음.
- 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중단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것임을 북한 정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내 최대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무시무시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숨기고 그 일부를 비밀로 해둔 것"이라며 자신의 증언에 오류가 있었음을 거듭 시인했음.

- 미 "북, COI 권고 따라 인권 개선해야"(자유아시아방송, 2.18)
 - 미국 국무부의 쟈 사키 대변인은 18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거듭 지적하면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음.
 - 사키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다루스만 "다음달 제네바서 새 북한인권 결의안 추진" (연합뉴스, 2.18)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토론회에서 기초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종식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북한의 납치 관행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 며 "다음 달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산하 서울 현장사무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고 밝혔음.
 - 또한 "유엔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고위급 정치회의" 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음.

- 킹 특사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 필요"(자유아시아방송, 2.19)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19일 미국 연방 하원 건물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동인은 바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라고 밝혔음.
 - 킹 특사는 정보 취득과 관련해 북한에선 다른 21세기 나라들과 다르게 여전히 라디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거의 유일한 공급원인 미국과 중국, 한국 등 해외에서 송출되는 대북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킹 특사는 이어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와 검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는 통화 시작 후 1분이 지나면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당국에 의해 도청된다는 것임.

- NYT "북한 해외노동자, 노예처럼 일해" (TV조선, 2.20)
 - 미국 뉴욕타임스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노예처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해 다음 달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아프리카 동상 건설현장까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한 근로자는 무려 15만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인권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뉴욕타임스는 1개 면을 통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비중 있게 다루며 국제사회의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음.

- 체코 당국자 "북 김평일 대사에 인권 문제 제기"(미국의소리, 2.21)
 - 체코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대사에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음.
 - 미국 워싱턴 주재 체코대사관의 야로슬라프 자이체크 공사참사관은 18일 인터뷰에서 "체코 외무부가 김평일 대사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고 밝혔음.
 - 이어 김 대사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밝힌 수는 없지만 "김 대사가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꺼린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 체코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고 자이체크 참사관은 밝혔음.

- 마이클 커비 "신동혁 증언자중 한명일 뿐...북핵 인권차원서 봐야" (연합뉴스, 2.21)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번복 논란과 관련, 신 씨는 여러 증언자 가운데 한 명이며 그의 증언 번복이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북한이 신 씨의 증언 번복을 고리로 COI 보고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미 수차례 말했듯이 북한의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일축했음.

- 커비 전 위원장은 "현행 "제노사이드 협약" 은 인종, 민족, 국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대량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정치적 관점, 즉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주민을 대량학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며 북한 인권문제 역시 제노사이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음.
- 이어 "북핵 문제도 인권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면서 "북한에 20기의 핵탄두와 미사일이 있고 잠수함도 배치돼 있다고 한다. 노후화된 핵 시설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많은 주민이 위험해 지고 또 핵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더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의 모든 국가를 위협에 빠뜨린다" 고 주장했음.

3. 탈북자

- 탈북자, 미 명문대 돌며 '정보 유입' 강연 (자유아시아방송, 218)
 - 한국의 비영리기구 '우리 하나' 는 18일 한국의 젊은 탈북자들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미국 보스턴 대학교, 워싱턴 디씨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등 명문 대학들을 방문해 북한에의 정보 유입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번 행사는 "북한 정보 고속도로: 북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주제로 2월 23일에 시작해 보스턴에 위치한 터프츠 대학,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그리고 뉴헤이븐 주의 예일대학,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한국의 젊은 탈북자들은 또, 3월 3일과 4일까지 워싱턴 디씨의 조지타운 대학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도 방문해 미국 학생들과의 만나 북한에서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방송을 접한 자신의 직접 경험을 나누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임.
 - '우리 하나' 의 회장인 탈북자 출신 박세준 씨는 "(미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젊은 탈북자들의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음.

4. 이산가족

- 미 이산가족들, 국무부에 가족상봉 지원 촉구(미국의소리, 221)
 - 미국 내 13개 주 이산가족 단체들이 연대한 재미이산가족전국연대(National Coalition for the Divided Families)가 18일 미 국무부에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산가족 문제가 중요한 국제적사안임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함.
 -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미-북 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지난 11월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음.
 -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커크 의원이 결의안이 아닌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 정부의 지원노력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많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유엔 긴급기금 대북 지원, 본래 취지 벗어나" (미국의 소리, 219)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가 지난 해 7월 14일

에서 25일까지 방북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규정된 용도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보고서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긴급한 인도주의 상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에 사용됐다고 비판했음.
- 또한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들이 이 기금의 자금으로 농부들에게 식량을 주거나 의료 시설을 재단장하고, 상수도를 보수하는데 사용한다고 밝혔음.
- 그 원인에 대해 북한이 특수한 상황이고 유엔 기구들이 극도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긴급구호기금의 규범이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으며, 유엔이 북한에 최소한의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음.
-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될 때 유엔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와 관계를 정립해 현지에 거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것임.
- 하지만 북한주재 유엔 기구들이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기존의 사업에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데 그치기 때문에 중앙긴급구호기금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많은 수혜 지역들이 전년도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선정되고,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북한 당국의 요청 때문에 선정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 또한 유엔 기구들도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자금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금의 지원을 신호탄으로 원조국들의 지원이 이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다.
- 이 경우 국제사회에 긴급한 위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북한이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따라서 북한주재 유엔 기구들은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호소할 새로운 당위성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긴급구호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북한주재 유엔 기구들은 분배감시 투명성을 높여 원조국들의 신뢰

- 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자금을 쓸 때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